

투데이 칼럼

학교 내 폭력사태 해결방안 중 하나

요즘 선생님에 대한 학생, 학부모가 가해자인, 학교 내 폭력사태가 슬프게도 전 국민의 뜨거운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시기도 있었던다.

어찌어찌 군사독재가 저물어 가고 경동의 ‘민주화시기’를 지나 ‘인권’이 회자되고 서서히 지각변동이 있었다. 이제는 역전이 되어 ‘학생인권보호’란 명분아래 ‘교권’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학부모,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혹자는 예전에 우리를 때릴 때 (그 당시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리던 것을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는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침울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윤희
파시코 대표이사

학교는 영리목적의 입시학원이 아닌, 인격도야, 흥미인간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확실한 규범아래 상호존중하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학문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가 인격형성, 평생체육,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며 학습하는 기관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이를여가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본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튼튼한 심신이 국방체력의 밑받침이 된다는 것도 직시하여 국가수준에서 좀 더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2023) 또한 국가재산인 유류교실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스포츠시설(휘트니스 클럽)로 개조, 지역 주민들에게(특히 중년 이상의~) 개방, 활용한다면 어르신의 기능적 상태(근육감소증, 근육위축의 지연, 예방),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 국민소득의 증가로 영양상태가 좋아져 청소년들의 외형적인 체격은 커졌지만, 1995년부터 각급 학교의 ‘체력장제’도 폐지되고 체육시간, 방과 후 체육활동도 줄어들어 기초체력이 예전의 청소년들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각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심신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중 하나로 정부, 지자체는 머리를 맞대고 위와 같은 접근이라도 시도하기를 적극 강조하는 바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국 기념비에서 제거되는 구소련 표상



7월 3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근로자들이 우크라이나 조국 기념비인 ‘비티키우시나 미티’의 빙판에 있는 구소련의 표상을 제거하고 있다.

가수 코코리 장례식, 비공개로 치러져



1일(현지시각) 홍콩에서 가수 코코리의 비공개 장례식이 열려 장례식을 마친 가족들이 고인의 사진을 들고 나오고 있다. 중화권 최고 인기 가수 코코리는 영화 ‘외출장’의 주제가, 중국어 버전 ‘불란’에서 물란의 목소리 연기와 주제가 등을 불렀다. 리는 지난달 2일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5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설

불안한 한러 한중 관계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듯 한 대통령 발언의 괴장이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일단 외교 채널로 항의가 들어온 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시기, 외신을 통하는 방법 등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당장,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미국이 핵 전략자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강화, 또 공급망과 기술협력 같은, 안보와 경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게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

유럽을 상대로 한 방산·원전 수출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는 없다. 한국과 러시아·중국 모두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한미일의 밀착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면서, 기존 미러·미중 갈등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번 일을 명분 삼을 수 있다.

러시아가 우리 입장을 ‘비유호적’에서, ‘적대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현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다. 북핵 억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 확장억제 전략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지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당은 문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여당은 이당이 정쟁에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왜 이 시점인지, 어떤 목적인지,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균형 외교’에서 서방 중심의 ‘가치 외교’로 무게를 옮기겠다고 정책적 판단을 했다면, 실익을 더 짜이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 문제

비대면 진료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초기증상은 초기증상을 대비면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이 우려된다는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경우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코로나19는 그나마 아이들의 증상의 양상이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은 그렇지 않다.

소아는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린 24개월 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에 오던 중 숨진 사례도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최근 3년간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보면 자택 사망자 수는 2020년 16명에서 2021년 131명, 2022년 991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재택 치료 즉 비대면 진료로 사망한 구체적인 수자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경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경우 절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병의 증상과 질환의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견해도 있다. 암 등 중증 질환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재활의학과의 경우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할 것이 많다. 그러나 환자가 매번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